

■ 정부, 오늘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 왜?

합법 노조 전환 압박 포석

정부의 관공서 내 전공노 지부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는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전환시키거나 해체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강제폐쇄를 앞두고 21일 "전공노가 집단행동을 위해 불법으로 노조를 만들어 선거개입, 음지훈련 폐지 요구 등 불법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불법 해소차원에서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직자들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입장 표명은 표면적으로는 불법행동에 대한 행정 조치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대한 압박은 물론, 향후 전공노를 법적 노조로 전환시키거나 국민의 여론 추이에 따라 해체 등 조치를 단행하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또한 행자부는 올 초 전공노 파업 결의와 관련, 국민들의 여론이 지극히 전공노에 비판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향후 강공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자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 전임자 근무 복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공노측은 본부 차원에서 정부의 지부 사무실 폐쇄 조치는

관공서내 해직자들 상주 공간 제거 "단체행동권 불허" 의지 강력 표명

전공노의 입지는 물론 전공노의 앞으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정부와 전공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인정 여부다. 전공노는 그동안 단체행동권 없는 교섭권은 의미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완전한 공무원의 노동 3

권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행동권 보장은 공무원들의 파업을 인정하는 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즉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갖는다면 정부로서는 직장폐쇄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공무원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직장폐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상 단체행동은 물론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노는 불법단체이며, 단체행동권 요구는 억지라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의 전공노에 대한 목표는 해체나 법적노조로의 전환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법외노조일 뿐이며, 사무실 폐쇄조치는 정부의 전공노에 대한 탄압일 뿐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청 전공노 소속 직원들이 21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자치단체의 전공노 지부 사무실 강제폐쇄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효숙 정국' 해법 열쇠는 민주당

"절차 문제 해결 되면 표결 참여"

일부 강경파 '자진사퇴 요구' 변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 민주당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효숙 인준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공조를 해온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 야3당 간에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어 원내 11석의 민주당의 행보가 핵심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야3당 중재안 수용

을 거부한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전효숙 인준안의 표결참여를 시사했고, 국중당은 '완전무결한 수습책은 새 인물 지명'이라며 한나라당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야3당 중재안으로 표결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없지않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인준안 표결 여부가 관건일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일단 표결참여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절차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효숙 헌재재판관 인사청문을 별도로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 청문절차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3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청문절차 진행이 옳고,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21일 오전에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도 절차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에는 응하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를 표시하겠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강경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도 최선의 해결책이란 의견도 당내에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운전과"인 김효석 원내대표조차도 "원내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 법사위 인사청문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고 표결처리하겠지만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도 맞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S프로젝트 정치적 이용 안된다"

〈서남해안 개발계획〉

박준영지사 "서남해안 포럼은 보조 역할 그쳐야"

박준영 전남지사가 서남해안개발계획(S프로젝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데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박 지사는 S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서남해안 포럼(공동대표 김정태·조우현)의 역할에 대해 주체적이지 아닌 보조적인 차원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남 서남해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S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특별법을 만든다는) 방향도 좋다"며 "그러나 S프로젝트가 기존에 전

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J(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프로젝트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의 기초를 흔들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S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J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의 인도를 늦추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장난"이라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또 NGO의 하나인 '서남해안포럼(공동대표 김정태·조우현)'이 S프로젝트 추진 주체처럼 비치는 것과 관련, "S프로젝트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일 수밖에 없다"며 "서남해안포럼이 추진 주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단지 S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S프로젝트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J프로젝트를 포괄하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F1 특별법은 S프로젝트 특별법과 성격이 조금 다른 만큼 따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순사건 진실 규명 법개정안 신속 처리를"

전남지역 국회의원 촉구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갑원 의원(순천)을 주축으로 한 전남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4년 한시규인 진실화해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의 3분의 1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특히 여순사건의 경우 조사 신청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러 전체 신청건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사 담당자는 불과 8명에 불과, 사건조사 로드맵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갑원 의원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으며 지금까지 많은 유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여·순천이 지역구인 서갑원, 주승용, 김성곤 의원을 비롯, 김효석, 신중식, 우윤근, 이낙연, 이영호, 한화갑 의원 등이 서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수공항 확장 등 건의

박지사, 여수방문 재경위 의원

정희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장과 안효성,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 3명이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울진지구와 화양지구 등 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이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울진산단 자유무역지역 조기조성 ▲여수~묘도~광양간 도로 조기개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여수공항 확장 ▲순천~여수간 북선 전철화 등 10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특히 전남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해남·진도 재보선 공모

한나라 3명 공천 신청

한나라당은 21일 10·25 재·보선 해남·진도 후보자 공모 결과 모두 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남·진도에는 광복군 21세기 농어촌발전연구회장, 설철호 전남도당 홍보위원장, 최응국 전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등이 지원했다. 한나라당은 이달말까지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광주·전남 노인시설 턱없이 부족

노인수발보험제 차질 우려

광주·전남지역의 노인요양·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오는 2008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

족해 504명의 노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시설부족에 따라 311명의 노인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사정은 비슷해 요양시설의 병상수가 1천171개나 부족하고, 230명의 노인들이 재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 152만원 따려지원

▶ 75% 연료비 절감!

▶ 무보증 장기일부

1588-8717

신영인내

신영인내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소개를 포함한 상세한 광고 내용.